

## 일본 수출규제/한일 관계 동향(2020.6.8.~2020.6.12.)

### 1. 강제징용 법률안 관련

□ 6월 8일 한국 야당 국회의원들은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을 재발의<sup>1)</sup>

○ (한국)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바 있는 '1+1+ $\alpha$ (양국 기업, 국민 성금)' 법안을 6월 8일 재발의함.

- 발의된 법률안은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 성금으로 '기억·화해·미래재단'을 설립하는 '기억·화해·미래재단 제정' 법안과 강제징용 피해조사를 위한 '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' 개정안임.<sup>2)</sup>

\* 2019년 12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법률안으로,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기한 만료로 폐기됨.<sup>3)</sup>

□ 일본 공영방송 NHK는 동 법률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망<sup>4)</sup>

○ NHK는 ① 원고 측 반발과 청와대측의 회의적인 견해로 한 번도 심의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된 점, ② 법안의 재제출에 여당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함(2020. 6. 8).

### 2. 일본기업 자산매각 관련

□ 일본 언론은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, 일본이 대항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<sup>5)</sup>

1) 「윤상현, 강제징용 배상 '1+1+ $\alpha$ ' 문화상案 재발의」, 「서울경제」, (2020. 6. 8).

2) 한일 의원연맹가와무라 간사장은 문희상 전 의장의 법률안이 해결책이라고 한 바 있으며, 아베 총리도 동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.

3) 「윤상현, 日강제징용 배상.. '1+1+ $\alpha$ ' 문화상안 다시 발의」, 「파이낸셜 뉴스」, (2020. 6. 8).

4) 「韓国 最大野党の議員ら 「徴用」問題解決目指し法案を再提出」, 「NHK NEWS WEB」, (2020. 6. 8).

5) 「検証：日韓再び対決モードへ 韓、輸出規制標的に強硬策 / 日、元徴用工「放置」に不信感」, 「毎日新聞」, (2020. 6. 9).

- 마이니치 신문은 “공시송달 조치가 효력을 발휘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실현된다면 일본은 한국측 자산의 압류, 보복관세 등 다양한 대항조치를 실시할 것” 이라고 보도함(2020. 6. 9 보도).
- 또한 “일본 정부는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이라는 이유로 주체적 관여를 피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‘부작위’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”고 보도함.

### 3.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재개 관련

□ 일본은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절차 재개가 실익이 없다고 주장<sup>6)</sup>

- 일본은 WTO 분쟁처리에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, 상소기구가 위원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“한국의 대응은 실효성이 없다”고 견제함.

---

6) 각주 5의 마이니치 신문과 동일 출처